

광주시 ‘제2순환도로’ 항소심도 이겼다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적법”
맥쿼리측 “상고...패소해도 사업 계속”

광주시가 전국 각 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영하는 대형 민간투자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별도의 운영업체를 설립, 고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민간투자업체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2면>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오전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두 가지 감독명령 가운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익귀속명령’은 귀속할 상대방, 대상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불분명해 이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자본구조의 원상 회복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대규모 SOC에 대한 민간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승소한 사실상의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이미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km)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전국 12개의 SOC를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재판부는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28.7%에서 현재 6.94%까지 낮추면서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

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매입할 태세지만,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자본구조를 바꿔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맥쿼리가 투자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창원 마창대교 등의 관련 지자체들도 이번

판결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부산시는 ‘광주시 승소’를 참조해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또 임선숙 광주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지역 민변 출신 변호사 4명과 김&장 및 광장 등 전국 최대규모의 법무법인들과의 대결로도 관심이 높았다. ‘이름값’에서 밀렸던 지역 민변 변호사들이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정연한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03년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10월 감독명령을 내렸으나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9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소태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는 해당 구간 사업자인 맥쿼리가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시민혈세 유출을 막아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나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응전략’ 마련 용역 발주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광주·전남의 기업유치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9일자 1면>과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

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

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광주·전남 등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 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창립했다.

앞서 이들 13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뒤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 지방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장 산·증설과 대학 이전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증설을 막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내 환경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安신당 ‘호남 쟁탈전’ 점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뒷발 사수’를 위한 민생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기구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도 광주지역 각 자치구를 돌며 시민과의 만남 행사를 갖는 등 세 확산에 나서 양 진영의 ‘총성 없는 선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도당은 전남 권역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앙당 정책공약 및 전남지역 정책공약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도당은 특히 대민봉사와 생활정치구현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자원봉사단’을 꾸려 생활지원·보건의료·일손돕기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남 곳곳을 도는 순회 봉사활동을 통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도당
정책 간담회·봉사활동
민생 정치 행보 시작

새정추
광주 자치구 순회
13~19일 시민 만남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최근 뒷발인 광주·전남에서 ‘안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민생을 직접 파고드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며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광주시당은 최근 ‘시민고충상담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시민고충상담센터’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정책간담회’는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뒀다.

시당은 9일 한국 광기슬원에서 1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선 패배 이후 광배해진 호남에서의 반(反) 민주당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민생정치 실현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남도당 또한 9일부터 민생·생활정치를 위한 ‘정책토론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간을 ‘새정치 주간’으로 정하고, 광주 시내 전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14일에는 광산구 노인복지관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16일에는 남구 빅스포 광장, 동구 충장우체국에서, 19일에는 서구 유스퀘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며 본격적인 세력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추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당 창당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국민추진위원 모집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과 ‘안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셈”이라며 “합계투기와 세 확산에서 물러설 경우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진영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심을 잡는 언론

연합뉴스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취재망을 보유한 연합뉴스는

국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